

제 5 장

기사수정/ 열람·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사례

사례 46

2018서울조정20 손해청구

IPTV를 상대로 조정신청하여 기사 열람·검색 차단 조치로 취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 A사는 특이한 사연을 가진 일반인 출연자들의 사연을 듣는 대담 프로그램에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였고, IPTV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송출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을 완벽히 모자이크 처리해주기로 한 A사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얼굴 상부, 옆모습 등 신체의 일부를 모자이크 없이 수 차례 내보내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고 있고, 병력 및 가정사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해당 조정대상보도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피해가 가중되었다며 A사 및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심리 전 A사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해당 보도물의 열람·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47

2018서울조정857 손해청구

조정대상보도에서 업체명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한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업체명을 함께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동일 제품을 수입한 공식수입업체는 거론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업체명만을 부각 보도하였고, ‘꼼수’, ‘밀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사진에 언급된 신청인 업체명을 수정 및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략]

당시 정부는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하고, 미국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기준에 따라 200달러, 기타 국가는 100달러 내에서 이들 품목을 구입할 경우 면세와 수입신고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략]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제품을 배송하는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둔갑해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들여오는 듯하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밀수’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례 48

2018서울조정987 정정청구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가 된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기업의 노조 집회에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는 해당 기업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청인을 어용노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출범 후 수 차례 노사협의를 하였고, 최근 임금위임을 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어용노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일부만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기업 직원들이 27일 열릴 예정인 노조의 “경영 정상화 촉구” 집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집회 일정에 합의했던 3개 노조 중 B노조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개 노조는 지난 25일 “이번 총집회는 경영 정상화 촉구, 2017년 임금 위임 조속한 해결 등의 목적이다”라며 27일 낮 12시 A기업 본사 정문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중략]

하지만 3개 노조 중 B노조는 결국 집회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 B노조는 25일 오후 11시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27일 집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B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개 노조가 함께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우리는 (27일 집회가) 조합원의 민의가 아니라고 느껴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집회 거부와 별개로 A기업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방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언론에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밑줄친 부분 삭제



사례 49

2018총복조정36 정정청구

피신청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 기초의원 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면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해당 선거구 후보자인 신청인은 타 정당 후보자의 구속이 선거와 무관한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시의원에 출마한 타 후보의 구속은 '폐기물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 검찰구속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는 ○월 ○일 지방선거에서 A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 B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공교롭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난 ○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반면 이번 C후보의 구속 시점을 놓고 지역 유권자 및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 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모 후보자가 구속되는데 이어 이번 C후보의 기습 구속이 겹치면서 의혹제기와 함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C후보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건으로 구속됐고 아직 후보 사퇴서는 접수된



것이 없다”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자격을 상실하므로 현재로서는 옥중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략]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예 출마한 E당 G 전 비서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예 출마한 E당 G 전 비서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조정대상보도 중 해당부분 삭제



사례 50

2018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정당 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보도에 대해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정당 대변인인 신청인이 기업 대미투자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의한 것임을 간과한 채, 정부의 반기업정서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일부만 발췌보도하여 의미가 왜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논평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업의 발언을 함께 게재했으나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정한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 반론이 포함된 내용으로 기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반시장·반기업적 환경을 견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모듈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엘지(LG)전자도 미국에 공장을 신설했거나 짓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을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펴며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을 범죄시까지 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라, 투자를 늘려라’고 뉘달하니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 5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7일 미국통상대표부가 발효한 미국 내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며 “미국 공장을 통해 세계 2위 태양광 시장이자 큐셀의 주력시장인 미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이프가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역시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미국 현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올해 초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또 현대차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혀 같은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불만을 표시했다. 복수의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리한 논평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논평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일부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대변인은 “‘한화 큐셀의 미국공장 신설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조치라는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사설에 근거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사례 51

2018서울조정1581, 1582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옥외광고 사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특수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곧 개통될 것이라는 잘못된 내용의 옥외광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이미 보도 이전에 광고물 교체 계획을 수립, 업체와의 계약까지 완료하였고, 보도 이후 광고물 교체를 완료하였다며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므로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홍보시설물 디자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해당 간판을 정비 완료하기로 업체와 계약했고, 7월 31일자로 교체 완료했다
- 보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교체가 오리무중이라고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한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광고 교체는 7월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김포시 ‘2018 지하철시대?’ 옥외광고 방치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도시철도를 올해 개통한다는 옥외광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개통 연기에다 시정홍보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오는 11월 예정이던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갑자기 내년으로 미뤄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략]

김포시 관계자는 교체할 광고 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안이 제작되면 작업에 들어가 7월말까지는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부제목 수정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7월말



사례 52

2018전북조정85 정정청구

공무원인 신청인의 원 발언 내용을 조정대상보도에 정확히 언급하여 기사를 수정한 사례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의 승진인사가 지난 지방선거의 후유증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지자체 인사팀장인 신청인이 직급승진에서 누락된 모 과장과 관련,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내용을 발췌, 왜곡하여 실제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내용은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이와 다르며, 신청인이 기사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해당 발언 내용을 실제 발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C군의 사무관 승진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승진인사를 하면서 올해 ○월 직위승진한 과장을 이번 승진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로 원래 보직이 있었던 보건소 ○급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번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B씨 동생의 아내다. 정년까지 겨우 ○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보직 팀장이 무보직으로 좌천된 배경을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A과장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일 것이란 관측이다. A과장은 민선○기 군수시절 ○계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올해 ○월 직위승진해 ○과장을 맡았었다. 민선○기 군수체제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과장



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직급 승진에서는 누락됐다. [중략]

인사부서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A과장이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며 “인사권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과장은 “군정전반을 고려해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53

2018서울조정1907 정정청구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조정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사립개인유치원을 없애 버리고 싶거나 학부모 유권자들은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제3자의 댓글을 신청인의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각종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 소제기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향한 ‘적개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박 의원은 운영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4000여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을 ‘비리집단’ ‘적폐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박 의원은 섬뜩하게도 사립개인유치원을 “씩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학부모 표를 무기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단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척결대상 정치집단’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다”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유치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정치 행위를 하는



소신없는 유권자’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유치원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잘 해달라”는 등 국회 의원과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립개인유치원을 “씩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등 협박성 폐친 댓글까지 등장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설마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박 의원의 인터뷰 발언과 페이스북 댓글을 정리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사립개인유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법인유치원들만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당신들의 사정을 봐줘서,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공교육의 영역에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투자비용 투자비용 노래를 부르는데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사례 54

2018강원조정18·19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보도를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삽입한 사례

조정취지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국제어학원장이 특정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강사를 탈락시키는 등의 특혜를 주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강사들을 자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특정 강사에게 특혜를 주거나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국제어학원 A씨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어학원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 조정대상보도의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신청인의 반론을 덧붙여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

○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없는 재채용 방식에 “명백한 갑질” 반발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도내 한 국립대학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시간강사 채용으로 기존 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일하는 강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강사실 앞



게시판에 ‘겨울학기 한국어연수 강사 인력풀 공고문’이 붙었다.

이 공고는 강사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강사가 부족하면 신규강사를 채용했던 이전과 달리 공고에는 ‘현재 강의 중인 모든 강사가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략]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A원장이 부임 후 같은 학과 출신인 B씨에게 연수추천 등 특혜를 지속해서 줬을 뿐만 아니라 전담강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지도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기존 전담강사를 탈락시키고 B씨를 뽑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특별반 수업을 담당하며 3개월 근무한 강사를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데 여기에 B씨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제목)
 - A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 없는 재채용 방식”에 반발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장인 A씨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데
 -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는데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강사채용과 연수 추천 과정은 관련 규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부당해고와 특정인에 대한 특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년 ○월 ○일 수정된 것입니다〉